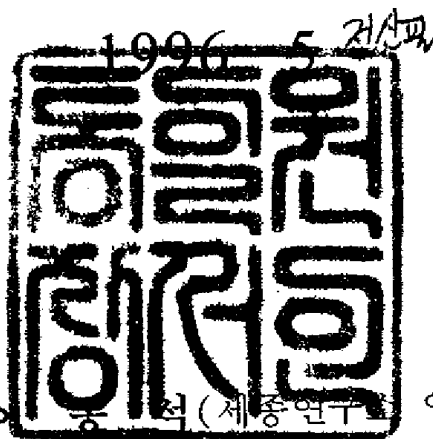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331.041 (34/6)
30/1



책임연구원 : 이종석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 김연철 (평화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보고서는 통일연수원이 자체계획에 의거 용역위촉한 연구결과로서 수록된 내용은 통일문제연구 및 정책개발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행처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통일원 통일연수원

<요약문>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I. 서론

이 논문은 남북한간의 가치관 통일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북한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을 분석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이 두어져 있다.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에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식규범과 아래로 부터 형성된 현실인식이 결합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규범은 일종의 통치담론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실제적 가치관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간접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귀순자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귀순자 인터뷰는 귀순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가치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에 비해 귀순자 인터뷰의 한계 또한 있는 데, 그것은 첫째, 귀순자 본인의 가치관과 북한 주민 일반의 가치관이 많은 경우 혼동되고 있고, 둘째, 귀순자들은 사실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북한관을 가지고 있다. 셋째, 귀순전의 가치관과 귀순이후 빈번한 강연 및 면담 등을 통해 익숙해진 학습된 의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넷째, 귀순자들의 직업 및 귀순이유 등에 따라 가치의식이 매우 다르다. 다섯째, 귀순자들의 직업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II. 가치관의 형성 및 변화조건

북한사회가 사상 우위의 사회임을 감안한다면, 공식규범이 위로부터 교육되고,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되는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의 규점적 가치

관계'로 맺어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대중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어버이수령'에 대해서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공식 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에 어느 정도 내면화 되어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지도자의 교체나 대중의 지도자 평가에 대한 인식 역시 남한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는 북한식의 모든 덕목을 지닌 주어진 전제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 정치는 최고지도자가 베푸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공식규범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사후 상당한 시간을 이른바 '유훈통치' 즉 '죽은 수령'이 통치하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러한 충실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로서 김정일의 능력은 김일성보다 못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집단적 조직생활이 최근들어 급격히 이완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의 권위가 약화되고 엄격한 조직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제시한 목표와 현실간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당에 대한 불신은 당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조직생활 자체를 형식화하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 총화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아비판 및 상호비판이 요식적 행사의 틀로 변하고 있음을 많은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끼는 당에 대한 불만은 또한 간부와 주민 사이의 차별대우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북한사회에 특권계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귀순자들이 확실하게 있다(18명)고 대답하고 있으며, 특권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당 간부를 지칭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불만에 대한 대응양식은 뚜렷하게 상반된다. 하나는 자기도 지위

상승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 등 대안적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한편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원이 되거나, 승진·진급 과정에서 청탁 및 뇌물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반면에 입당 등 지위상승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물질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자신들 체제의 평가와 관련, 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생활의 이완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식학습체계를 통해서 내면화된 사상 학습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공식규범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제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자신의 체제에 불만족하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 북한식 체제의 미래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경제인식

북한의 규범적 경제인식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해 있으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규범에서의 강조가 현실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전인민적 소유나 협동적 소유보다 개인적 소유를 주민들이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촌의 경우 협동농장과 개인터밭 중 어느 것에 더 정성을 쏟느냐는 질문에 100% 개인터밭에 정성을 쏟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현실적 차원에서 공식규범의 규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일단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비공식 영역을 통해 사적 소유형태들

이 증가하고 있고, 계획경제는 계획자체의 불완전성에 의해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계획의 경우 공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질적 통제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시장관계가 확대되는 장소는 농민시장이다. 농민시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 불법으로 유통되며 언제 어디서나 개설되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암시장 역할도 하기도 한다. 농민시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을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 기호품(담배, 술), 의류 등이 주종이다. 이밖에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급과정에서 많은 물품들이 빼돌려 지고 있으며, 이 물건들이 농민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 시장을 확산시킨 계기는 첫째, 변경구역의 활성화, 둘째, 1989년 평양축전의 영향, 셋째, 시베리아 벌목노동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통하여 유입되는 소비품의 영향, 넷째, 생필품의 절대부족과 함께 식량배급의 중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배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생존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장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중대한 변화는 금지품목이던 식량매매가 허용된 일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심각한 주택난으로 주택배정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혹은 개인간의 주택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의욕과 관련, 혁명적 열기가 소진된 현재의 시점에서 정치도덕적 측면에 호소하는 방식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북한 역시 상금이 나 장려금과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다지만 이 또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 보상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 노동자들은 주로 작업장 내부에서 고의적인 노동회피 등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 사회 인식

북한의 공식규범에서 사회란 자본주의에서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이나 결합과는 다른, '수령-당-대중'이라는 위계적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북한공동체의 특징을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국가는 가족의 이미지가 확대된 실체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 현상은 2차집단의 1차집단화를 의미한다. 북한은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개인승배에 참여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 대가정내 '가족'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일심단결이며,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수령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심단결, 믿음과 사랑이라는 규범이 현실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주민들 간의 단결과 의리를 해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민들이 북한사회를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이유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간부와 하급간부 등 위계구조내에서의 특권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계구조는 다른 한편으로 부패와 흥정의 여지가 개입할 소지를 제공한다. 이는 지위상승 등이 공평정대한 합리적 절차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의 전통적 요소의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 이렇듯 북한 사회내에서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개인주의적 연고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공동체적 믿음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심단결이나 동지애적 의리와 같은 공식규범은 위로부터의 통합이데올로기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식 담론은 가정내에서의 의사결정에도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게 되는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가정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설문결과

는 가장의 권위가 결정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공식규범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회 구성원리는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북한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갈등, 혹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는 상정될 수 없다. 이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은 결합된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공식규범에서 이와같이 강조되는 집단적 원칙은 실제적 차원에서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 자체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동원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조직생활에서 주민들이 보여주는 행위 형태는 다양하다. 일부 주민들은 충성과 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 차원에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차원의 저항이란 대개, 요령이나 태만 등으로 나타난다.

VI. 결론 및 정책대안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더욱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귀순자 인터뷰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귀순자 조사 과정에서 느낀 것이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북한 체제에서 학습한 공식규범을 부정하는 형태로,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부적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 방향은 일단 북한의 공식규범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깨닫게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인식케 해야 한다. 즉 북한체제에 대한 재교육과 남한체제에 대한 적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남한이 상대적 유도체제가 되어 자신도 발전적으로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이끌어 내는 통일방법이 현실적이라면, 북한의 규범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중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 내서, 이를 남한의 체제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5
1. 연구목적 / 15	
2. 서술방식 / 16	
II. 가치관의 형성 및 변화조건	20
1. 공식규범의 습득경로 및 기능 / 20	
2. 현실적 차원에서 가치관의 변화 / 23	
III. 정치인식	26
1. 정치관의 논리적 기초: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26	
1) 혁명적 수령관 / 26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28	
2. 정치 개념과 대중-지도자 관계 / 32	
1) 동원적 의미의 정치개념 / 32	
2) 대중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 / 33	
3. 대중과 당의 관계 / 36	
4. 체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 / 41	
IV. 경제인식	44
1. 경제관의 논리적 기초: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 44	
1) 사회적 소유에 대한 강조 / 44	
2) 계획과 시장 / 48	
2. 경제인식 변화의 배경: 공급부족과 계획의 실패 / 51	
1) 공급상황의 악화 / 51	

- 2) 계획의 실패 / 53
- 3. 시장관계의 확대와 물질적 가치의 확산 / 55
- 4. 근로의욕과 주민들의 노동관 / 59

- V. 사회 인식 62
 - 1. 사회관의 논리적 기초: 사회주의 대가정론 / 62
 - 2.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66
 - 1) 집단주의의 강조 / 66
 - 2) 개인주의의 확산 / 67

- VI. 결론 및 정책대안 69

- 참 고 문 헌 73

- [부록]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설문지

I. 서 론

1. 연구목적

북한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은 남한과 다르다. 정치·경제적으로 남북한은 상이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북한은 억압적 유일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남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상이성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양상도 판이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남북한간의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외형적인 정치, 경제제도상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더 중요한 통일은 양쪽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통일하는 일일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보듯, 외형적 제도 통일보다 내면적 가치통합이 더욱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은 전쟁과 이후 형성된 대결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치통합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통일의 과제 역시 중요하지만 남북이 서로간의 삶의 방식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역시 매우 필요하다.

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먼저 서로 얼마나 다른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에서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가치관은 통일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많은 부작용을 감안할 때 바로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한간의 가치체계의 상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남북한간의 가치관 통일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북한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을 분석하는 데 우선적인 초점이 두어져 있다.

2. 서술 방식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에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공식규범과 아래로 부터 형성된 현실인식이 결합되어 있다.

공식규범은 그 사회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그 사회의 주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규범적 가치는 공동체가 합의한 가치일 수도 있고 또 국가권력이 강제한 단순한 통치담론일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 가치가 전자에 해당된다면, 정치·경제와 관련된 공식규범은 일종의 통치담론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또한 도식적으로 보자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주의적 가치관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맑시즘과의 일정한 구별을 표명한 주체사상이 북한적 가치관을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공식 규범은 대중학습용 공간문헌과 신문, 학술잡지, 김일성·김정일 저작등을 통해 유통된다. 공식규범에 비판적 의미를 지니는 대항적 매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출판물은 공식규범이라고 규정해도 틀린말은 아니다. 따라서 공식규범을 설명하는 부분은 북한에서 최근 출판된 문헌들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실제적 가치관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주민들은 의식표현에 있어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된다. 규란(Timur Kuran)은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동구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민들은 개인적인 선호와 공적인 선호라는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또 다른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사회일수록 선호위장이 발달하며 인민들의 의식구조를 관찰하기가 더 어렵다고 주장한다.¹⁾

북한주민들의 실제적 가치관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까닭은 이러한 이중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지 사례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간접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귀순자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 귀순자 인터뷰는 비록 제한적 의미를 지니지만, 현지사례연구의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다.

즉 귀순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가치의식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좀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증언의 교차면접과 같은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귀순자 인터뷰의 한계 또한 명확히 전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귀순자 본인의 가치관과 북한 주민 일반의 가치관이 많은 경우 혼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귀순자 인터뷰를 통해 북한 주민 일반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둘째, 귀순자들은 사실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북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특히 무역업무에 종사했던 귀순자(외화벌이 일꾼, 자재공급원 등)들은 물질적 이해관계에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돈 버는 일에 더욱 우선적인 가치를 둔다고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셋째, 귀순자들의 가치관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귀순전의 가치관과 귀순이후 빈번한 강연 및 면담등을 통해 익숙해진 학습된 의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 아닌 분야에서는 솔직한 답변보다

1)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elop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44, no. 1,

는 ‘사전에 준비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째, 귀순자들의 직업 및 귀순이유등에 따라 가치의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군인신분으로 귀순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고위층의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주민들과 달리 특권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역시 직업, 신분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다섯째, 귀순자들의 직업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다양화하고 있지만,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군인, 외교관, 유학생, 무역업무 종사자, 북송교포, 별복공 등이 다수이다. 북한체제의 기본계층인 농민이나 노동자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귀순자들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조사대상의 직업별 편중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북한주민들의 실제적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듣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설문조사는 제한된 표본으로 인하여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가치관 일부를 드러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귀순자 증언을 정리한 자료들도 충분한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특히 여러기관에서 녹취한 귀순자들과의 녹음자료는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된 귀순자 증언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귀순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이 가명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이미 공식매체에 이름이 거명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I - 1〉 설문조사에 응한 귀순자들의 인적사항

	성 별	나 이	학 력	귀순전 직업	당원 여부	공 훈
C1	남	28	대 졸	조선인민군 보위국 지도원	0	국기훈장 3급 군공메달
C2	여	47	고 졸	가정주부	0	X
C3	남	32		군인(중위)	0	훈장 3개 메달 4개
C4	남	27	전문학교졸	군인(보위부)	0	3대혁명붉은기 훈장 전사의 영예 훈장 국기 훈장 3급 군공 메달 군사복무 영예 메달
C5	남	28	대 졸	특수군인	0	X
C6	남	35	전문학교졸	도 사적 보존 지도원	0	공로메달
C7	여	36	전문학교졸	재단사	X	X
C8	남	52	전문학교졸	기계공장 공장장	0	국기훈장 2급(2) 국기훈장 3급(1) 공로메달(2)
C9	남	33	대 졸	교원	X	X
C10	남	37	전문학교졸	공군중위	0	X
C11	남	35	대 졸	설계원	X	X
C12	남	37	대 졸	사무원(원자력 공업부 남천연합)	0	공군메달, 공로메달 전사영예훈장 2급 국기훈장 1급
C13	남	33	사범대 중퇴	기계기사	0	군공메달
C14	남	35	전문학교졸	사무원	0	공로메달
C15	남	28	농업대졸	함경도 농촌경제 위원회 지도원	X	X
C16	여	55	일본소학교	가정 주부	X	X
C17	남	47	대 졸	사회안전부	0	X
C18	남	28	대 졸	3대혁명소조원	X	X
C19	남	33	고 졸	운전수		군표창
C20	남	32	대 졸	요리사		

설문조사에 응한 귀순자들의 성별, 나이, 학력, 귀순전 직업, 당원여부, 공훈여부 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성별에서는 남자(17명)가 여자(3명)보다 많다. 연령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16명). 학력을 보면, 대부분이 전문학교 이상인 점을 알 수 있다. 귀순전 직업 분포를 보면, 군인(5명)이 많고, 나머지는 사무원부터 가정주부까지 다양하다. 당원여부를 보면, 비당원(6명)보다 당원(12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훈여부 역시 9명이 1개이상의 훈장 및 메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II. 가치관의 형성 및 변화조건

의식 및 가치관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변화한다. 관습이나 전통처럼 과거로부터 일상화 되어 있는 규범이 있는가 하면, 대중적 학습체제를 통해 교육되어진 규범도 있다. 특히 북한사회가 사상 우위의 사회임을 감안한다면, 공식규범이 위로부터 교육되고,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되는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기도 한다. 80년대 이후 다양한 사적 자율화 현상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이전에 가치관의 형성 및 변화의 조건 등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식규범의 습득경로와 기능

북한에서의 규범적 가치관은 학교교육은 물론 광범한 대중학습체계라는 성인교육망을 통해서 전체사회에 주입된다. 북한에서 대중학습이 진행되는 조직적 틀은

설문조사에 응한 귀순자들의 성별, 나이, 학력, 귀순전 직업, 당원여부, 공훈여부 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성별에서는 남자(17명)가 여자(3명)보다 많다. 연령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16명). 학력을 보면, 대부분이 전문학교 이상인 점을 알 수 있다. 귀순전 직업 분포를 보면, 군인(5명)이 많고, 나머지는 사무원부터 가정주부까지 다양하다. 당원여부를 보면, 비당원(6명)보다 당원(12명)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훈여부 역시 9명이 1개이상의 훈장 및 메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II. 가치관의 형성 및 변화조건

의식 및 가치관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변화한다. 관습이나 전통처럼 과거로부터 일상화 되어 있는 규범이 있는가 하면, 대중적 학습체제를 통해 교육되어진 규범도 있다. 특히 북한사회가 사상 우위의 사회임을 감안한다면, 공식규범이 위로부터 교육되고,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되는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기도 한다. 80년대 이후 다양한 사적 자율화 현상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이전에 가치관의 형성 및 변화의 조건 등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식규범의 습득경로와 기능

북한에서의 규범적 가치관은 학교교육은 물론 광범한 대중학습체계라는 성인교육망을 통해서 전체사회에 주입된다. 북한에서 대중학습이 진행되는 조직적 틀은

당조직과 당이 지도하는 근로단체조직들이다. 대중학습은 생활총화, 정치학습, 기술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300만 명의 조선노동당 당원들은 위계적 계통을 통해 당의 사상을 교육받고 학습한다. 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당원 대중을 당에 포섭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근로단체이다. 북한은 현재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전형적인 ‘인전대(transmission belt)’인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여성동맹등 4개의 근로단체를 통해서 광범한 대중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직업, 계층, 성(性), 연령에 따라 각 범주의 유일한 대중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이들 근로단체들은 북한 성인남녀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유일지도체계아래서 이들 근로단체들은 이익대표체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체들은 철저하게 사상 교양단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²⁾ 것이 이들 조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광범한 인민대중이 근로단체조직망에 포섭되어 정치생활을 진행하는 체계를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정치조직 생활체계”라고 부른다.

한편 이러한 대중학습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적극적인 사상교육이다. 이는 사회주의사상과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등 북한지도부가 원하는 체제작동 논리들을 대중에게 설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식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개조가 가능하다는 인간개조의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북한에서 인간개조사업의 기본임무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것”으로 규정된다.³⁾ 이러한 인간개조 사업은 자연개조사업, 사회개조사업과 함께 북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상학습의 정치적 의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현실적 효과를 갖는지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상화된 학습

2) 『영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서울, 도서출판지평, 1989 재발간), 17쪽

3) 최립 「사상혁명론 사회주의건설의 생명선」, 『철학연구』 1992년 제3호, 15쪽

으로 교육된 가치관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부분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두번째는 정보여과의 기능을 한다. 정보여과기능(information - filtering function)이란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와 유입되는 정보를 여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정보가 극도로 폐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부분적으로 왜곡시키고 지도부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북한의 노동신문 등이 소련 및 동구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확대하여 선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북한은 동구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곤궁한 생활등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주의는 버리면 죽음, 지키면 승리’라는 식의 선전보도를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남한에 대한 정보통제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여과기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음은 여러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 사회를 통제할만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세째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각종 속도전 등 대중동원 운동 등에서 보듯, 학습수준 자체가 인센티브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는 의미외에 ‘근로자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즉 작업반은 생산단위이지만, 동시에 정치 사상 교육의 말단단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중적 교양단위라는 특징은 작업반 평가에서 생산계획 완수정도와 더불어 당정책 이해정도나 혁명전통 학습정도가 주요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⁴⁾ 다시 말해서 생산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와 더불어 당의 역사나 주요 방침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4) 천리마 작업반의 평가기준과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조선중앙연감(1962, 178--9) 참조

이렇듯 사상학습의 차원, 정보여과의 기능, 동기부여의 효과등으로 인해 북한의 규범적 가치관은 주민들에게 체화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현실적 차원에서 가치관의 변화

하지만 북한의 위계적 학습체계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규범에서 강조하는 집단주의, 희생정신, 동지애적 의리와 같은 규범이 아니라,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등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경제침체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식량이나 생필품 등에 대한 국가배급이 제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대안적 방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물자 빼돌리기, 암시장에서의 교환, 뇌물수수, 절도, 직장이탈 등의 갖가지 일탈현상들이 그것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식량이나 생필품 등에 대한 국가 배급체계는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배급 자체가 엄격한 사회적 통제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직장이동 등의 사회적 유동성 역시 배급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가의 배급체계가 이완되면서,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여행제한이 완화되고 있다. 특히 식량배급의 경우 함남, 함북, 자강, 양강, 강원, 평북도 등에서 적게는 보름, 많게는 3-6개월쯤 밀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러 황해남북도, 평안남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행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동이 늘게 되면 정보의 통제능력 역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각 기관, 기업소 등의 출장원(자재공급원 이나 행정요원)등이 생생한 지방뉴스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초보적이지만 교환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는 대외경제관계의 활성화이다. 중국과의 변경무역이 활성화되고, 대외무역이 강조되면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입당 추구 대신 외화나 물건에 접근할수 있는 외교관·무역일꾼·창고장·물자관리원·운전기사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변화의 한 단면이다. 귀순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인기있는 직업은 당간부, 안전원과 같은 특권적 직업도 있지만, 외교관, 운전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래의 표는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표II-1참조>)

이 표에서 보면, 인기없는 직업은 노동자, 농민, 탄광, 교원, 군관, 건설업등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규범에서 강조하는 전통적 직업들이 인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육체적 노동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기있는 직업들이 주로 돈이나 특권이 생기는 분야임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 주민들이 돈벌이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장사에 나서려고 갖가지 핑계로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확인된다. 무역일꾼이 득세하고 ‘갑작부자’가 늘어나는 것도 90년대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다.

<표 II - 1> 설문 내용: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인기있는 직업 3가지와 인기없는 직업 3가지를 쓰시오.

	인기 직업(분야)	비인기 직업(분야)
C1	무역회사, 상업 부문, 운전사	건설업
C2	외교관, 당 일꾼, 군대	농민, 광부
C3	후방물자 취급자, 운전수	노동자, 농민
C4	당간부, 운전수, 봉사 사업 부문(상점, 식당 등)	
C5	외교관, 대외 봉사 기관, 중앙당 기관	교원, 노동자, 군관, 안전원
C6	무역 회사, 상업 부문, 운전사	

C7	당 일꾼, 경제무역, 운전수	일반 노동자, 군관, 안전원
C8		
C9	외화벌이, 운전수, 식당	농장, 탄광, 광산
C10		
C11	당간부	
C12	당, 안전부, 보위부	농민, 노동자
C13	운전수, 식당, 상점 판매원	탄광, 광산, 농장원
C14	무역부문, 호텔, 상업 및 식당	농민, 탄광, 광산, 건설
C15		
C16		
C17	당간부, 법(法)기관, 과학자	
C18	예술인, 간부, 교사	탄광, 광산, 농촌(노동자)
C19	무역, 외화벌이 사업소	농촌, 탄광, 광산
C20		

세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다. 특히 중국의 이른바 ‘보따리 장사’들은 외부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남한 소식도 포함되어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남한의 가요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입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과 자본주의적 정신의 유입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설문 내용을 통해 정보유입 경로의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II-2〉 설문내용: 선생님이 귀순전 남한을 알게 된 계기는?

설문 문항	응답자수(명수)
① 남한 방송	14
② 중국교포	13
③ 동료	4
④ 외국출장	1
⑤ 외국방송	1

* 중복 응답 포함. 중복 응답은 중국교포와 남한 방송이 많았음.

여기에서 보면, 20명 중 14명이 남한 방송을 듣고 남한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교포들이 북한의 정보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면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현실적 차원에서 경제침체가 지속되어 국가배급체계가 악화되는 현상, 무역관계의 활성화 현상, 그리고 외부정보의 유입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가의 공식규범체계를 침식하고, 개인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일탈현상이 소련이나 동구의 체제전환 이전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제한적임은 틀림없다. 다만 공식규범과 현실적 가치가 이중화되고, 혹은 충돌하게 되면, 체제 안정성이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공식규범과 현실적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III. 정치 인식

1. 정치관의 논리적 기초: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북한 주민들이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북한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이 북한에서 정치활동을 규정하는 논리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1) 혁명적 수령관

북한 정치체계의 정점에는 '수령'이 있다. 혁명적 수령관⁵⁾은 "혁명투쟁에서 수

5)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평가는 이종석 『조선로동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역사비평사,1995), 101-106쪽, 115-120쪽 참조.

여기에서 보면, 20명 중 14명이 남한 방송을 듣고 남한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교포들이 북한의 정보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면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현실적 차원에서 경제침체가 지속되어 국가배급체계가 악화되는 현상, 무역관계의 활성화 현상, 그리고 외부정보의 유입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가의 공식규범체계를 침식하고, 개인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일탈현상이 소련이나 동구의 체제전환 이전 상태와 비교해 볼 때, 제한적임은 틀림없다. 다만 공식규범과 현실적 가치가 이중화되고, 혹은 충돌하게 되면, 체제 안정성이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공식규범과 현실적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III. 정치 인식

1. 정치관의 논리적 기초: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북한 주민들이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북한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이 북한에서 정치활동을 규정하는 논리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1) 혁명적 수령관

북한 정치체계의 정점에는 '수령'이 있다. 혁명적 수령관⁵⁾은 "혁명투쟁에서 수

5) 혁명적 수령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평가는 이종석 『조선로동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역사비평사,1995), 101-106쪽, 115-120쪽 참조.

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견해와 관점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의 이론가들은 이미 1970년대 초에 ‘수령의 지도와 대중’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당시 그들은 역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지만 지도자 없는 대중은 무의식적인 비조직 군중에 지나지 않으며 지도자의 영도가 없는 혁명운동은 산만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영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수령의 현명한 영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⁶⁾ 여기서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그들 스스로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로 통일단결 될 때’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⁷⁾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은 수령-당-대중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속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곧 수령과 당, 수령과 대중, 당과 대중의 관계를 해명하는 일도 포함하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에서 수령의 지위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령도자”⁸⁾로 규정된다. 여기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란 수령이 인간유기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뇌수와 같은 존재라는 데서 비유된 명제이다. 마치 생명유기체의 여러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요구가 뇌수에 반영되고 뇌수는 그 요구를 실현하도록 유기체의 각부분에 지령을 주는 것처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그것을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대중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 수령이라는 것이다.⁹⁾

이런 의미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이익의 최고 대표자, 체현자’로도 표현된다.

6) 이상의 내용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동경, 구월서방 번각발행) 122 쪽

7) 백철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공고한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165 쪽

8)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9쪽

9) 수령지위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서 수령지도의 무오류성이 도출된다.

나아가 이런 논리에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는 수령만이라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¹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정당이나 사회조직들이 대변한다면, 북한의 공식규범에서는 수령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혁명적 수령관은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다. 혁명적 수령관에서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로 설정된다. 따라서 이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견해와 관점, 자세와 립장”을 그 본질로 삼게 된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을 ‘개인’이 아닌 ‘제도’로서 파악한다. 그리고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선언적인 명제위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당에 대한 충실성=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단순논법을 만들어 내고 실제 정치과정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마련한다. 북한 정치관의 핵심이 바로 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충실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이 집단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공산주의 도덕규범 전반에 시종일관하게 관통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는 것이다.¹²⁾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1980년대 들어와서 혁명적수령관에 의해서 파생되었다.

10) 김정하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하는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 133—134쪽

11)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602쪽

12) 박상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에 대한 공산주의도덕의 최고표현」 『철학연구』 1992년 제3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6쪽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정일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¹³⁾ 북한사회를 모델로 한 유기체적 체제관이다.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해서 형성된 당 국가 사회를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의 사회체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이분법에서부터 출발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며 활동하는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살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생명이 있다. 이 양자중에 보다 중요한 생명은 정치적생명이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나도 그가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은 그 생명의 중심이다. 그 근거는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의하면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한다.¹⁴⁾ 이말은 구체적으로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수령과 혈연적 관계를 맺을 때 정치적생명을 받게 되고 유지 공고화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령-당-대중은 사회정치적생명체내에서 ‘혈연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대중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아버이수령’에 대해서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¹⁵⁾ 그리고 역으로 인민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민위천(以民爲

13)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관련 해서 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근로자』 1973년 제8호 참조

14) 김정일「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992,167쪽 및 김정일「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때 대하여」『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210쪽. 북한에서 ‘아버이 수령’이라는 담화는 논리적으로 볼 때 수령이 정치적 생명을 부여했다는 이 명제로부터 근거를 얻고 있다.

15) 김정일「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天)에 바탕을 둔 수령의 인덕정치가 약속된다.

북한은 이렇듯,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은 바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역할도 그 영도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에 의하여 대표된다고 본다.

바로 이렇게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아버지 수령, 어머니로 규정되는 당, 대중이 ‘혈연적관계’에 기초해서 혁명의 주체로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혁명적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체제, 이것이 바로 사회정치적생명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는 이 생명체를 움직이는 원리 역시 일반적인 사회체제의 원리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가치나 원리는 자유, 평등, 민주, 복지등에서 선택적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는 기본원리로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되는 것도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들 사이에서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하지만 그들 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인 것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 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충실성)와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이다.¹⁶⁾

결국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자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라는 그들만의 도덕률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 제시하는 도덕률대로라면 운명공동체로 규정되는 체제가 잘못된다 해도 그것은 지도자와 대중이 모두 포괄되는 전체 사회구성원 공동의 책임이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수령을

16) 김정일, 앞의 글, 163쪽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일은 ‘혁명적 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자기수령, 자기당,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국체(國體)로 받아들임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재의 낙후성이나 제반 문제는 수령지도의 오류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담화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공식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에 어느 정도 내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 설문내용: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관련,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은?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① 매우 많다	2
② 많다	4
③ 보통이다	5
④ 적다	5
⑤ 매우 적다	3

이 설문 결과는 북한 주민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담론 자체를 받아 들이는 사람과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이종석, 앞의 책, 115-120쪽 참조.

2. 정치개념과 대중-지도자 관계

1) 동원적 의미의 정치개념

앞서 설명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북한 정치의 기본원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개념에는 보편적 의미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북한식 사회주의 정치가 그 의미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서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된다.¹⁸⁾ 이러한 정치에 대한 개념규정은 정치를 경제의 반영으로 보며, 계급관계·계급투쟁의 산물로 보는 전통적인 맑시즘¹⁹⁾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은 맑시즘이 정치를 “계급의 발생, 국가의 발생과 함께 기원한 것으로 이해”한데 반해 주체사상은 정치의 기원을 “인류사회의 발생과 일치시키며 계급이 완전히 폐절된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정치는 의연히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²⁰⁾ 북한의 정치 개념을 특징적으로 규정하면, 우선적으로 ‘위로부터의 동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정치를 ‘존재하는 현상’으로 보다 ‘주어진 어떤 체제’에 복무하는 ‘규범적인 명제’ 혹은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정치를 “설복 즉, 교양을 통하여 대중이 자기의 참다운 리해관계를 옳게 자각하도록 도와주며 조직동원사업으로써 대중이 자기의 단합된 힘을 통일적으로 발동하여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끌어 주는 것”으로 규정하는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²¹⁾ 즉 ‘이익갈등의 대표체제’로 규정할 수

18) 최희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수립된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17쪽

19) 현재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의 개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경제의 집중적 표현, 일정한 경제기초에서 발생하고 그 경제기초를 위해서 복무하며 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계급투쟁과 계급 처리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내용이 된다.” 中共黨員大辭典編委會 『中共黨員大辭典』 (北京, 華齡出版社, 1991) 81-82쪽

20) 최희열, 앞의 글, 17쪽

21) 최희열, 앞의 글, 19쪽

있는 자본주의적 정치개념과는 상이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논리구조는 정치의 주체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의 정치적 주체는 개별 사회구성원 혹은 집단등 다양하게 적시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치의 주체는 혁명의 주체이기도 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규정된다. 따라서 정치의 내용에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관계라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남한의 정치관에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나 각 사회세력들간의 갈등과 조화가 문제시되나 북한의 정치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대립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정치적생명체내에서 결합되어 있는 통일체로 인식된다. 이러한 결합의 진상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포섭(包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를 위계적으로 포섭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북한의 규범적 가치속에 권력획득을 지향하는 복수의 정당이 전제되는 다당제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²²⁾ 실제로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고 규정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유일적 정치장악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는 복수정당제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8조 ①항) 남한과 대조되는 것이다.

2) 대중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되면, 지도자의 교체나 대중의 지도자 평가에 대한 인식은 남한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공식논리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통일체’를 이루는 대가정의 가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틀에서는 가족구성원인 대중이 가장인 지도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22) 다당제에 대한 북한의 혐오감을 잘 보여주는 문헌으로는 김정일 「사회주의전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자 참조.

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한 집안의 가장이 수시로 교체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우기 수령은 북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위에서 받아들여진다. 즉 그것은 한 집안의 가장은 가족구성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가 어질고 또 능력이 있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수령은 이 점에서 전능의 완벽한 지도자로 전제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는 북한식의 모든 덕목을 지닌 주어진 전제 조건으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 정치는 최고지도자가 베푸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인덕정치²³⁾, 이민위천(以民爲天)²⁴⁾, 광폭정치²⁵⁾ 등이 정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물론 이 정치의 기저에는 수령의 믿음과 사랑이 전제된다. 이 믿음과 사랑에 기초해서 베풀어지는 정치에 대해서 대중은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 인식 속에서 다원적 견해를 지닌 복수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의 의미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특히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지도자상(指導者像)에서 공개적인 경쟁적 절차를 통한 최고지도자의 선출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상정될 수 없다.

이러한 공식규범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사후 상당한 시간을 이른바 ‘유혼통치’²⁶⁾ 즉

23) 인덕정치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로서 “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여기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정치를 해나가는 것”으로 규정된다. 「인덕정치가 실시되는 사회주의만세」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자 참조

24)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이민위천에 대해서 북한분원들은 김일성이 일찌기 10대의 어린시절부터 이를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철, 앞의글, 159쪽

25) 광폭정치란 “전체인민을 한품에 안아주는 정치”로서 “기본군중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정치”로 묘사된다. 이러한 광폭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릇이 커야하며 그릇이 크지 못하면 대중을 다 담아내지 못하며 대중이 정치를 외면하게 된다’거나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전체인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인만큼 어디까지나 정치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자 참조

‘죽은 수령’이 통치하는 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도 이러한 충실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로서 김정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일단 김정일의 능력은 김일성 보다는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표 III-2〉 설문내용: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비교하여 최고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지도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C1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2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3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4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5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6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7	김일성 만큼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
C8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9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10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11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12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13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14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15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16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17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18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C19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20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보면, 김정일의 능력이 김일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없다. 김일성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 역시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0%(10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 역시 9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에 대해 일단 김일성 보다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김정일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귀순자들은 북한 체제의 위기의 원인을 최고지도자에 돌리기 보다는 중간관료나, 당간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물론 공식담론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는 부패나, 정책적 실패 등을 항상 중간관료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중간관료들이 최고지도자(수령)의 교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북한 주민들 역시 이러한 공식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중과 당의 관계

공식규범적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는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전제하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이라는 논리로 요약된다. 그러나 과연 현실적 차원에서 이러한 규범이 어느 정도 내면화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다양한 대중조직망에 포섭되어 있다. 즉 생활 자체가 개인중심이 아닌 조직중심으로 묶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총화와 각급단위에서 사상학습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직생활’은 모든 주민을 집단 단위로 통제하고 이것이 체제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집단적 조직생활이 최근들어 급격히 이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완현상의 중심에 바로 당권위의 약화와 당의 통제력 이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의 권위가 약화되고 엄격한 조직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제시한 목표와 현실간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당이 제시한 대안적 목표, 예를 들어 ‘이 밤에 고깃국’과 같은 선전이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⁶⁾

한편 당에 대한 불신은 당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조직생활 자체를 형식화하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 총화 시간에 이루어 지는 자아비판 및 상호비판이 요식적 행사의 틀로 변하고 있음을 많은 귀순자들은 증언 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끼는 당에 대한 불만은 또한 간부와 주민 사이의 차별대우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북한사회에 특권계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귀순자들이 확실하게 있다(18명)고 대답하고 있으며, 특권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당 간부를 지칭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특권층으로 당간부를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위급 당간부들은 일반 주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평수가 넓고, 웬만한 물건은 모두 외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류는 아파트 단지내의 공급소에서 받고 있었다”라든가, “도당 간부과장 집에 가보니 뇌물을 많이 받아서인지 냉장고, 헤어드라이어에다 침대가 갖춰져있고 TV도 여러대 있었다”라는 증언 등이 대표적이다.²⁷⁾

사실 북한에서는 직위에 따라 물자공급표가 다르고 공급량도 다르다. 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간부들이 이용하는 병원과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의 약품의 질이나 진료서비스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또한 공급소를 통해 제공

26) 이와관련된 대표적인 귀순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양강도 운흥군 인민회의 대의원(지방의회 의원격)으로 주민접촉이 많았던 정기해(52)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 하고 있다. “옛날부터 양강도의 후창·풍서·운흥군에서 뗏목을 타던 노동계급출신의 노동당원들이 ‘노동당의 발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쑤다 해도 믿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하다. 노인들은 ‘인민생활이 지금처럼 도탄에 빠진 적은 없었다’며 ‘왜정때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중앙일보, 95년 2월 7일

27) 윤웅, 여금주, 증언. 중앙일보, 1995년 2월 9일

되는 식품등의 공급조건 역시 직위와 등급에 따라 질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8) 이밖에도 간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와같은 당원이나 간부들이 누리는 특권은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설문내용: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에 특권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까?

	특권 계층 존재 유무	특권 계층
C1	확실하게 있다.	당 간부, 안전기관, 보위부
C2	확실하게 있다.	중앙당 간부 등
C3	확실하게 있다.	당 간부
C4	확실하게 있다.	군당 책임 비서관 이상 간부, 안전원, 보위원
C5	있는 편이다.	중앙당 과장급 이상 간부
C6	확실하게 있다.	
C7	확실하게 있다.	
C8	확실하게 있다.	노동당 간부, 보위부, 안전부
C9	확실하게 있다.	당과 기업소의 간부들
C10	확실하게 있다.	출신 성분 차이
C11	확실하게 있다.	빨치산 출신, 고급간부, 북송자
C12	확실하게 있다.	고위 간부층
C13	확실하게 있다.	함일투사 유족
C14	확실하게 있다.	
C15	확실하게 있다.	당간부,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C16	잘 모르겠다.	
C17	확실하게 있다.	유급(일하지 않는) 전문 당간부
C18	확실하게 있다.	간부 계층
C19	확실하게 있다.	당 행정 간부
C20	확실하게 있다.	고위층 친인척

28) 김영성, 남명철 등의 증언, 중앙일보, 1995년 2월 9

물론 이러한 불만에 대한 대응양식은 뚜렷하게 상반된다. 하나는 자기도 지위 상승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 등 대안적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단 북한에서 지위상승의 전제는 당원이 되는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당원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특권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입당의 좌절은 곧 인생의 실패를 뜻한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젊은이들 중에서 경쟁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목적도 군대생활중 입당의 기회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입당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의 진로와도 직결된다. 부모가 당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식들 속에서 편 가르기가 벌어 진다는 의미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중 4년때 부모의 입당여부가 공개되는 데, 이때 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편 가르기를 한다. 부모가 당원이 아니어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낀 몇몇 친구들은 ‘아버지는 왜 당원이 되지 못했느냐’고 집에 가서 따지기도 한다.

한편 당원이 되거나, 승진, 진급 과정에서 청탁 및 뇌물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표 III-4)

조사결과 북한주민들 다수가 승진이나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하다(19명)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부패의 문제가 매우 일상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부패 현상은 체계내재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지위상승이나 직업이동, 작업장내에서 유리한 작업조건의 획득 과정에서 중간 관료(중간 당간부 포함)들의 재량권이 매우 크다. 당성이나 당에 대한 헌신성의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이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 상급간부들과의 관계가 대면 관계(face-to-face relationship)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뇌물 등의 부패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표 III-4) 설문내용: 북한 주민들은 승진이나 진급을 위해 뇌물 및 청탁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가?

C1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2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3	뇌물이 필요하다.
C4	뇌물이 필요하다.
C5	뇌물이 필요하다.
C6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7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8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9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0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1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2	뇌물이 필요하다.
C13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4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5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6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7	뇌물이 필요하다.
C18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19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C20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반면에 입당 등 지위상승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물질주의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젊은이들은 당성보다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지만 인기있는 직업이 주로 돈벌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표 II-1 참조)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 역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수입이 없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젊은이들의 직업관도 식료, 옷, 담배, 맥주 공장등 먹는 문제와 관련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는 것이다.²⁹⁾

4. 체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 미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일단 북한의 공식 규범이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소련 붕괴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은 각종 공식매체를 통해 ‘주체사상’과 ‘우리식’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민위천, ‘인민을 위해 복무함’ 등의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단군릉 발굴 등 ‘조선민족 제일주의론’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체제 통합을 위해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주민들은 이러한 공식규범에서 당조하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특징지우는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III-5> 참조)

<표 III-5> 설문내용: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도는?

C1	보통이다.
C2	보통이다.
C3	보통이다.
C4	높다.
C5	높다.
C6	높다.
C7	높다.
C8	매우 낮다.
C9	보통이다.
C10	낮다.

29) 김광욱, 박수현 등의 증언, 중앙일보 1995년 2월 7일

C11	보통이다.
C12	보통이다.
C13	높다.
C14	보통이다.
C15	보통이다.
C16	보통이다.
C17	낮다.
C18	보통이다.
C19	매우 낮다.
C20	보통이다.

설문 결과,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매우 낮다 포함)고 응답한 사람은 4명인데 비해, 보통 혹은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16명(보통 11명, 높다 5명)이나 된다. 이를 통해 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조직생활의 이완이 확산되고 있지만 공식학습체계를 통해서 내면화된 사상 학습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공식규범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체계의 영향력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식 사회주의가 우월한 체제라는 점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Ⅲ-6〉 참조)

〈표Ⅲ-6〉 설문 내용: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C1	높다.
C2	낮다.
C3	매우 낮다.
C4	매우 높다.
C5	보통이다.
C6	매우 낮다.
C7	보통이다.
C8	매우 낮다.

C9	낮다.
C10	낮다.
C11	낮다.
C12	낮다.
C13	보통이다.
C14	보통이다.
C15	보통이다.
C16	보통이다.
C17	낮다.
C18	보통이다.
C19	매우 낮다.
C20	보통이다.

설문 결과,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공식선전의 신뢰도에 대해서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매우 높다 1명, 높다 1명),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낮다 6명, 매우 낮다 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체제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자신의 체제에 불만족하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설문 내용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표 III-7〉 설문내용: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훨씬 높다.	5
②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훨씬 높다.	6
③ 세대와 관련없이 체제 불만이 높다	8
④ 세대와 관련없이 체제 불만이 낮다	없음

* 1명은 무응답

이러한 인식은 곧 바로 북한이 주체사상대로 나가면,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연결되고 있다.

〈표 III-8〉 설문내용: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대로 나가면 북한이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① 잘 살 수 있다.	0
②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 질 것이다.	1
③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3
④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다.	5
⑤ 매우 악화될 것이다.	11

설문 결과, 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도 없었으며, 현재보다 조금 나아 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역시 3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명,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이나 된다. 즉 대부분이 현재의 북한식 체제의 미래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경제인식

1. 경제관의 논리적 기초: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1) 사회적 소유에 대한 강조

북한의 규범적 경제인식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해 있으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로 규정하고 이 제도는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이러한 인식은 곧 바로 북한이 주체사상대로 나가면,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연결되고 있다.

〈표 III-8〉 설문내용: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대로 나가면 북한이 현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① 잘 살 수 있다.	0
②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 질 것이다.	1
③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3
④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다.	5
⑤ 매우 악화될 것이다.	11

설문 결과, 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도 없었으며, 현재보다 조금 나아 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역시 3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명,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이나 된다. 즉 대부분이 현재의 북한식 체제의 미래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경제인식

1. 경제관의 논리적 기초: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1) 사회적 소유에 대한 강조

북한의 규범적 경제인식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해 있으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로 규정하고 이 제도는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질서가 집단주의 원칙에서 세워진다”고 한다.³⁰⁾

북한의 경제논리에서 특히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경제 문헌은 “사회경제제도의 성격은 어느계급과 사회적집단이 경제제도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면서 그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요인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로 보고 있다.³¹⁾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자본주의경제에서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극복하고 “소유와 노동이 결합되고 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³²⁾

한편 북한에서 생산의 기본형태는 사회주의적 협동생산이다. 사회주의적 협동생산이란 좁은 의미에서 “개별적 대상의 제품을 단위로 하여 그 생산에 참가하는 생산단위들 사이에 직접 맺어지는 계획적인 생산적 연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생산에서 “주되는 것은 전사회적 범위에서 생산단위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획적인 생산적인 연계”라고 한다.³³⁾

북한 문헌들은 맑시즘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생산관계의 기본 구성부분으로 보면서 생산관계의 다른 내용, 즉 생산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의 호상관계, 생산물의 분배관계를 규정하는 기초”로 인식함으로써 생산관계의 내용을 정식화하고 소유관계의 위치를 밝혔다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맑시즘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사회경제제도로 넓혀서 보지 못하고 생산관계의 변화발전의 주인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측면에서 고찰하지 못한 ‘제한성’을 보였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³⁴⁾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주체

30) 리기반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 『경제연구』 1994년 제1호, 26쪽

31) 권오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제도』 (평양:평양출판사,1993) 44쪽

32) 권오현, 앞의 책, 59-60쪽

33) 이상은, 김전중 「사회주의적협동생산과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 『경제연구』 1993년 제4호, 8쪽

34) 권오현, 앞의 책, 45쪽

의 경제이론이 사회경제제도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 위치를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가 결들인 이론적 연술을 고려치 않는다면 결국 북한의 규범적 경제인식에서 핵심은 전통적인 사회주의국가에 나타나듯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시키며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밑에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초”로 인식한다.³⁵⁾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두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전인민적 소유’란 “사회주의국가를 통한 전사회적범위에서 전체인민들의 집단적 소유”를 말하며 ‘협동적 소유’란 “개별적 협동단체의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를 뜻한다.³⁶⁾

여기서 보다 높은 단계의 소유형태가 ‘전인민적 소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전인민적소유’로 전일화된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소유형태는 ‘협동적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소유로의 전환’이다. 북한은 소유관계의 전인민적소유를 달성함으로써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완전승리체제’의 기본조건인 무계급사회의 달성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식은 완강하다. 북한은 농업에서 개체호의 단독영농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소상품생산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거부

35) 김기호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을 거세하려는 현대수정주의 이론의 부당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53쪽.

36) 권오현, 앞의 책, 52쪽.

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착취와 압박의 사회경제적 근원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라며 소상품 생산자들의 사적소유는 생산자들 사이의 경쟁과 가치법칙의 작용에 기초하여 빈부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결국에는 계급분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고수와 전인민적 소유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추호도 양보하여서는 안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³⁷⁾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발전의 합법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소유제도를 받아들여 사회주의제도를 기초로부터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복귀하는 반동적 행위”로 규정한다.³⁸⁾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구체적 차원에서 첫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점유권과 처분권을 고수하는 것이며 둘째,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이용권과 경제적 이득에 대한 사회적 취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그러나 이러한 공식규범에서의 강조가 현실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전인민적 소유나 협동적 소유보다 개인적 소유를 주민들이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촌의 경우 협동농장과 개인터밭 중 어느것에 더 정성을 쏟는냐는 질문에 100% 개인터밭에 정성을 쏟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장사나 무역 등을 통해서 ‘전인민적 소유’를 벗어난 개인적 소유형태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문제는 2절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37)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 『경제연구』1993년 제1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45쪽.

38) 전성일, 앞의 글, 45쪽

39) 박인덕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고수와 발전의 본질적 내용」 『경제연구』1993년 제3호, 27-29쪽.

2) 계획과 시장

한편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계획들이 계획기간, 계획범위, 계획단위별로 세워진다. 이를 간단히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IV-1〉 북한의 계획형태

분류기준	형 태		내 용
	전망계획		장기적인 기간의 종합적 계획
계획기간	현행계획	연간계획	일년, 분기, 월 기간동안의 계획
		분기계획	
		월계획	
계획범위	부문별계획		경제부문들의 균형과 생산적 연계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지역별계획		행정지역을 단위로 지역들간의 연계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
계획단위	전략계획		국가계획위원회가 세우는 계획
	작전계획		부문 및 지역의 생산지도단위들이 세우는 계획
	전투계획		기업소 등 기본생산단위들의 구체적 경제활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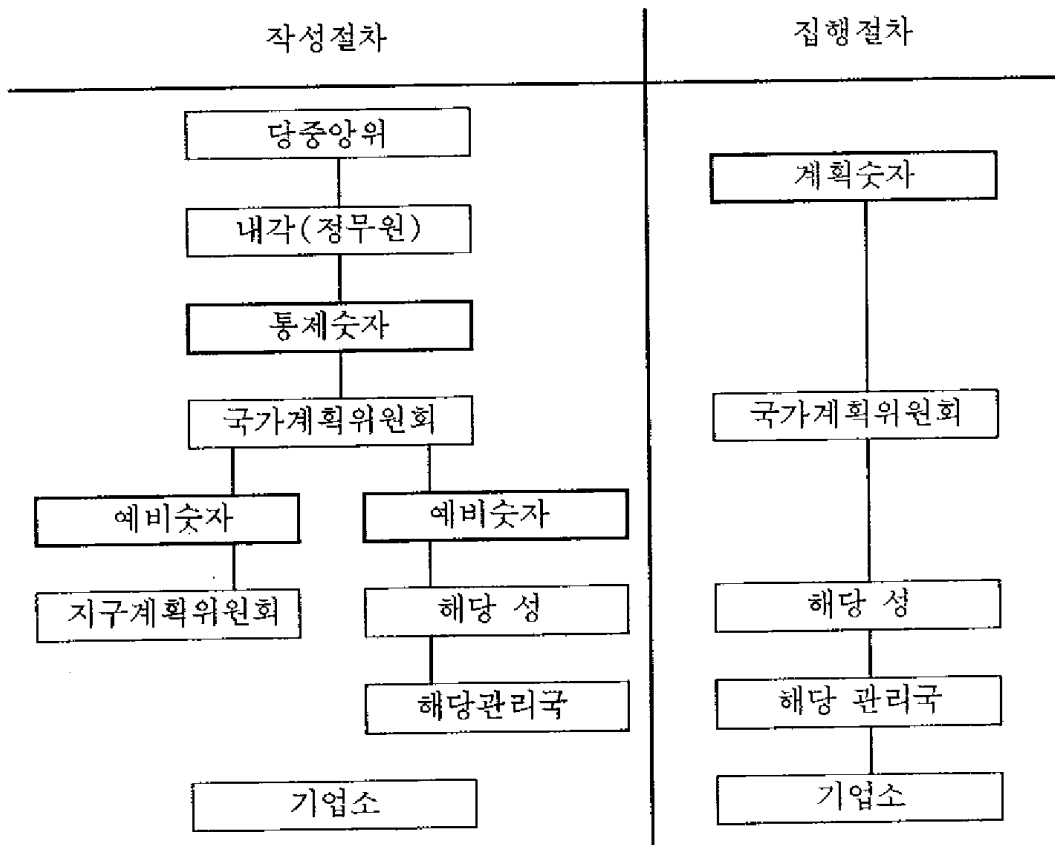
출처: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385--7쪽을 참조하여 작성

현재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계획체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조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계획의 일원화란 “국가계획기관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부서들이 하나의 계획화 체계를 이루고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의 세부화란 “국가계획기간들이 당의 정책과 객관적 현실에 맞게 직접 전반적 경제발전과 각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연결시키며 모든 단위들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릴 수 있게 하는 계획화방법”을 지칭한다.⁴⁰⁾

이와같이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일적 지도하에 계획화 사업을 일원화하고, 전국가적 계획에서 기업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구체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계획화 체계이자 방법으로 주장된다.⁴¹⁾ 북한에서 계획숫자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계획숫자 작성 및 집행절차



한편 사회주의적 소유와 계획경제를 규범적 경제가치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의 존재는 원론적 의미에서 부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라는 비적대적이지만 이중적인 소유관계의 존재, 농

40)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2) 395-6쪽.

41) 고승호 지음, 양재성 옮김, 『경제경제의 이해』(서울;평민사, 1993) 221쪽.

촌부에서 물질수요 부분의 부족, 외국과의 무역등으로 인해서 상품과 시장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생산수단의 상품성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모든 교환물을 다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은 협동단체와 국영기업소들간의 교환, 협동단체간의 교환, 외국과의 교역 등의 대상이 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치법칙이 작용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의 지배적 경제부분인 국영기업소들간의 유통을 상품적 형태로 규정하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품생산에서처럼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한편 북한은 전인민적소유, 즉 국가적 소유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전량 상품 및 상품적 형태로 실현되지만 협동단체에 생산된 생산물은 협동단체의 소유가 되며 일부는 상품으로 교환되므로 상품화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농민시장의 존재이다. 농민시장은 원래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로 발생하였다.⁴³⁾ 이론적으로 이 농민시장의 존재는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남아있고 국가가 주민들에게 모든 소비품을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북한경제문헌의 인식이다.⁴⁴⁾ 북한은 농민시장이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고 인민들이 자유롭게 소비품을 국영상점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충족해질 때까지는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공식규범에서 소유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소유, 혹은 전인민적 소유가 강조되고, 경제 운영메카니즘에서는 계획의 우위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차원에서 이러한 공식규범의 규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일단

42) 이상은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9년 3월 4일.

43)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9년 3월 4일.

44) 『경제사전』1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85) 368쪽.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비공식 영역을 통해 사적 소유형태들이 증가하고 있고, 계획경제는 계획자체의 불완전성에 의해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계획의 경우 공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질적 통제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인식 변화의 배경: 공급부족과 계획의 실패

1) 공급 상황의 악화

북한에서 주민들의 경제인식이 변화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침체와 이에 따른 공급부족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국가적 영역에서의 경제행위에 몰두하는 것이다.

심각한 공급상황의 일차적 원인은 대외경제관계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채택해 왔던 북한에서 구소련의 붕괴 등과 같은 상황적 조건의 악화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경제부문의 심각한 공급부족현상을 가져 왔다. 에너지의 공급악화와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율이 낮아지고, 그 결과 자재난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동율 저하와 자재부족은 많은 귀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현상이다. 모든 공장.기업소가 전력난에 시달리고 유류난 때문에 화물자동차들이 목탄차로 개조되고 있음이 더이상 새삼스럽지가 않다. 전력난으로 지방산업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한 채 서있고 간장, 된장, 국수등 식품계통만 힘겹게 가동중이라고 한다. 전력난의 심각성은 당국이 절전운동을 본격화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⁴⁵⁾

하지만 북한의 공급상황 악화는 자재공급 자체의 결함때문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이 내세우는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특징중 하나가 바로

45) 자세한 내용은 엄만규, 여만철, 박수현, 정기해, 정진만 등의 증언을 참조. 중앙일보, 1995년 4월 4일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이다. 즉 자재와 원료를 ‘우로부터 아래로, 직접 생산현장에까지 실어다 주는 공급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 도입된 자재공급체계의 ‘목표’는 “성 및 관리국은 산하공장·기업소에, 공장·기업소는 작업현장에 현물을 가져다 줌으로써 생산자들로 하여금 생산에 주력하며, 생산에서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며, 자재수급에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과 막대한 낭비(노동력,자금) 현상을 청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아래, 중앙의 성, 관리국이 자재공급에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자재공급상사⁴⁶⁾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공장, 기업소까지 자재를 공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재공급사업은 목표대로 현실화될 수 없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재공급 계획체계 자체의 결함이다. 자재공급계획은 내각상무회의에서 분기에 한번씩 비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순환과정의 병목으로, 자재를 석달분씩 미리 보장하라는 지시는 지켜질 수 없었다. 그래서 자재공급계획을 분기별로 세우는데,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생산의 파행성으로 내각은 계획적으로 자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자재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내각이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면 자재공급계획이 의미가 없어지고 자재공급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계획달성을 위한 자재의 고의적인 비축현상 때문이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지금 부, 총국들이 본위주의를 쓰면서 자재를 필요이상 쌓아두고도 자재공급총국에 보고하지 않으며, 자재공급총국에서 남는 자재를 다른 부문에 돌려주라고 지시하여도 잘 집행하지 않는다”⁴⁷⁾고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장 기업소들이 계획달성을 위해 쓰지도 않는 자재를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고 생각하기 때

46) 자재상사들은 다른 성, 관리국의 자재상사들과 자재 매매계약을 맺고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였다가 공장들에게 자재를 공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47)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1973년 2월 1일)」, 『김일성 저작집 28』 129--30쪽

문이다.

이렇게 ‘노동력과 자재를 무턱대고 많이 받아 낭비하거나 기계를 비롯한 생산 설비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놀리는 현상’, 또는 ‘다른 공장이야 계획을 수행 하건 못하건 그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 계획을 하고 상금을 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공급체제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자재공급체제가 있어도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성마다 자재상사들이 조직되어 있지만 사실 이름뿐이고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할 수 없이 많은 업무일꾼(자재공급 일꾼)들이 자재를 얻으러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계획의 실패

한편, 경제인식의 변화는 계획의 실패로부터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 계획경제는 앞서 지적했지만, 북한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핵심적 근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장지향적 행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획자체가 전체경제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대외 경제관계의 악화로 인한 공급상황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계획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내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첫번째 문제는 지구계획위원회 등 계획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지구계획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성, 관리국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견제·감시 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지구계획위원회를 해당 지방정권기관에 소속시키지 않고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적 현상이 계획체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나 감시의 강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여러번 계획체계가 보완되어도 이 문제들이 항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은 문제의 핵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두번째는 공장, 기업소차원에서 생산계획은 최소화하고, 자원공급은 언제나 최대로 신청하는 현상 때문이다. 김일성은 이를 “지금 공장, 기업소일군들이 계획을 세울때 생산은 통제수자보다 적게하며, 자재와 노력은 통제수자에 예견된 것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국가계획위원회 역시 ‘합리적’으로 대응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통제수자를 어기고 추가적인 보장조건을 자주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일부러 통제수자를 내려 보낼 때 자재와 노력을 줄여서 내려 보낸다”⁴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무원과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의 어느 부문에 어떤 종류의 생산설비가 얼마나 있고, 그 생산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결과는 ‘과학적 타산 없이 경제사업을 지도하는 것’, 즉 ‘주먹치기로 사업하는 현상’이 일반화 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업관행은 ‘계획체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계산의 한계’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사실, 계산의 한계때문에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큰 지표들만을 성들에 내려 보낼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내려온 큰 지표들을 성에서 더 구체화하고, 기업소에서는 성에서 받은 계획을 더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국가계획에 맞물린 지표들은 법적 성격을 띠지만, 성이나 기업소들의 계획에만 들어 있는 지표들은 조작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른바, ‘도의적 계획’으로 불리는 것이다. 김일성은 ‘도의적 계획’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결과 “국가계획이 내려가도 성이나 공장, 기업소에서들에서 계획자

48) 김일성, 앞의 연설, 앞의 책, 128쪽

표를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현상”⁴⁹⁾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이와같은 계획의 실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개혁을 실시한바 있다. 특히 85년 이후 연합기업소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연합기업소의 계획작성 권한이 커진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이 또한 국가 계획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점에서 절대적 이니셔티브는 아니다.⁵⁰⁾ 제도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둘러싼 기본적 흥정체계(Bargaining System)가 여전히 작동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계획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없다.

계획체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체경제에서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대외경제관계의 악화는 내적 모순을 더욱 확대시킨 계기를 제공하였다.

3. 시장관계의 확대와 물질적 가치의 확산

앞서 살펴 보았지만, 계획경제의 불완전성은 다양한 교환을 기초로 한 시장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한다. 현재 북한에서 시장관계가 확대되는 장소는 농민시장이다. 농민시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 불법으로 유통되며 언제 어디

49)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9년 6월 30일)」『김일성저작집 24』 29-36쪽

50) 연합기업소가 최초로 조직된 것은 1973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공업관리의 기본고리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5년 7월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고승효, 앞의 책, 190쪽 참조. 또한 고승효는 85년 이후체제에서는 정무원의 부, 위원회를 대신하여 연합기업소가 국가계획위원회의 지도하에 산하기업과, 또는 다른 연합기업소와의 경제적 연관을 조절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 작성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계획화 사업에서 연합기업소의 이니셔티브가 적극적으로 발휘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승효, 앞의 책, 222-7쪽 참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책의 목표일 뿐이지, 실제 정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지닌다.

서나 개설되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암시장 역할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이러한 의미의 암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고, 80년대 후반부터 더욱 확산되었다.

농민들이 부업으로 생산한 물품을 거래하는 장소인 농민시장은 평양 등 도시에는 구역별로 1개소, 지방은 군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도시(구역) 개설 시장은 상설화(매일)되고 있으며, 지방(군)은 10일 간격으로 개설된다. 거래상품으로는 개인터밭에서 생산된 쌀, 깨, 콩 등 농작물, 닭 계란 등 축산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신발 비누 등 각종 생활필수품 등의 시중구입이 어렵게되자 불법 암거래가 크게 성행되고 있다. 거래되는 물품은 국정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으며 질 또한 상당히 양질이다. 특히 암거래 물품은 국정가격보다 수십~수백배까지 호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한 거래가격 결정, 소비자-공급자의 직접적 연결 등 자본주의적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⁵¹⁾ 농민시장에서 어떤 물품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 결과가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표 IV-3〉 참조)

〈표 IV-3〉 설문내용: 농민 시장에서 국정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였습니까?

	경험유무	구 입 품 목
C1	있다.	수산물, 계란, 담배
C2	있다.	옷, 신발, 비누
C3	있다.	과일
C4	있다.	쌀, 생선, 기타 모든 일용품
C5	없다.	
C6	있다.	신발, 녹음기, 양복감
C7	있다.	양복감, 식료품, 고기, 계란
C8	있다.	담배

51) 내외통신, 주간판 929호(1994.12.1)

C9	있다.	담배, 술, 쌀, 의류
C10	있다.	의류
C11	있다.	담배, 신발
C12	있다.	담배, 육류
C13	없다.	
C14	있다.	
C15	있다.	신발, 천, 술, 담배
C16	있다.	계란, 배추, 닭
C17	없다.	
C18	있다.	술, 담배, 고기
C19	있다.	신발, 담배, 술
C20	있다.	고기, 계란, 채소

설문결과는 대부분 있다(17명)고 응답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식료품, 기호품(담배, 술), 의류 등이 주종이다. 이밖에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급과정에서 많은 물품들이 빼돌려 지고 있으며, 이 물건들이 농민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여만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함흥의 국영상점에서 4원50전 하는 비닐구두가 일단 농민시장에 나오면 1백60~2백원정도, 2원80전짜리 내의는 30~40원, 1원50전짜리 가스라이터는 20원등 10배에서 최고 40배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한다.⁵²⁾

북한에 시장을 확산시킨 계기는 다음의 몇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국경지대의 각 도, 각 군에서 인접 중국 연변지역과 자유무역을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변경무역이 활성화 되었다.⁵³⁾

둘째, 1989년 평양축전의 영향도 크다. 이때 중국 등지의 상품들이 유입되었고, 축전개최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52) 중앙일보, 1995년 1월 20일

53)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23) 26쪽

세제, 시베리아 벌목노동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통하여 유입되는 소비품이 주민들에게 소유욕구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

네제는 생필품의 절대부족과 함께 식량배급의 중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배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생존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장사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중대한 변화는 금지품목이던 식량매매가 허용된 일이다.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92년초 남포에서 시작된 장마당의 식량매매는 94년에 이르러 전국적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3~6개월, 즉 6~12회분의 식량배급이 밀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국이 식량매매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심각한 주택난으로 주택배정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혹은 개인간의 주택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3년 9월 북한을 탈출, 중국에 머무르다 부산항을 통해 귀순한 박성철씨(34)는 북한에서의 주택 사거래는 지난 85년께부터 시작됐는데 공장이나 협동조합, 당에서 배분하는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주택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개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⁵⁴⁾

요약하면, 시장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주민들의 물질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돈이 있으면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대학에 입학도 할 수 있고 웬만한 문제도 뇌물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을 만큼 돈의 위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4) 조선일보, 1995년 9월 16일

4. 근로의욕과 주민들의 노동관

북한은 50년대 전후복구건설기부터 노동력 동원에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외연적 성장전략은 대중동원 운동, 정치사상 중심의 기업 운영 등을 통해 강화되고 확대되어 왔다. 이에 여전히 노동력 증대를 위한 각종의 동원정책이 행해지고 있다.

노동력 동원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는 의무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든지 해마다 일정기간 육체노동에 동원된다. 사회노동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9년 3월 1일 「내각결정 18호」로 사회의무노동제를 도입, 학생·사무원 등에게 매년 일정기간 의무노동에 참여케 했다. 의무노동일수는 대학생이 연 10주, 고등학생이 8주, 그리고 중등반학생이 4주로 되어 있다. 사무원은 4~6주로 규정돼 있다.

인민학교 학생들은 주변 농장에 나가 물을 주거나 벌레를 잡는다. 고중 3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농촌지원에 참가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대형 건축공사나 다리 건설 등에 참여한다.

하지만 의무노동은 북한의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사회노동은 농촌지원이다. 농촌지원은 고중 3학년이 되면 시작된다고 하는데, 고중생은 40일 정도지만 대학생은 90일 정도다. 통상 1년에 2회로 나뉘어 가고 봄철엔 '모심기전투', 가을철엔 '가을걷이전투'에 참가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언자들의 실제적인 노동과정을 들어보자. 윤웅은 「평양 철도전문대학 재학중 매년 황해남도로 농촌지원을 갔다. 봄에는 5월10일부터 70일,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 10일 정도 간다. 봄철에는 농촌지원 탓에 평양시 전체가 조용하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대학생 김명세씨는 「농촌지원은 봄철 2~3

개월, 가을철 20일 ~1개월 정도다. 규정은 대학생의 경우 매년 70일 이상이다.」고 한다. 박수현씨는 「고종 3학년때부터 대학 전기간에 걸쳐 농촌지원을 갔다. 길주, 명천, 선봉, 온성지역 협동농장에 갔는데 통상 농촌지원 나가면 학생들이 농장 강냉이를 습격하므로 농민들은 싫어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당정간부, 사무원을 비롯한 전주민들이 매주 금요일 의무적으로 노동에 참가하는 금요노동이라는 것이 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치 않으나 70년대 후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이 노동사업이 당정고위간부들과 군중들의 관계개선과 간부들의 사상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금요노동 역시 실제적 노동과정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순자 임영선은 「금요노동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농촌에 맥주등을 싸가면 농가에서 개를 잡아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간부들은 금요일에는 먹을 것을 싸가지고 나가 하루 놀다 온다」고 증언했다. 또한 외교단사업총국 고운기 씨는 「금요노동 때는 작업복을 입고 삼을 들고 나간다. 88년에는 대성산 유원지에 김정일화를 키우러 갔다. 그러나 하루종일 트럼프를 치며 놀다오곤 했다. 안전부원들도 안전부장과 함께 부업지로 금요노동을 나가지만 막상 일 나가서는 먹고 마시고 노니 소풍날 같다. 금요노동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고 한다.⁵⁵⁾

북한 지도부 역시 이러한 노동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정간부는 물론 예술선전대, 방송선전차 등을 동원해 경제선동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매체에서는 이같은 경제선동이 북한경제 활력에 관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탄광이나 농촌, 중요 건설대상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술선동이나 해설선전, 「직관선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

55) 중앙일보, 1995년 4월 11일

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최대의 연·아연생산기지인 검덕광업연합기업소(함남 단천)의 경우 중앙과 도에서 당간부는 물론 행정경제간부까지 직접 파견되어 경제선동팀과 연계, 광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출근길이나 거리 등에서 예술선전대가 노래와 연주를 통해 사기를 북돋우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또 방송선전차를 이용해 각 작업반이나 조직망별로 경쟁의식을 부추겨 경제선동을 극대화하고 있다.⁵⁶⁾

하지만 이러한 경제선동은 한계가 있다. 특히 1950년대와는 달리 혁명적 열기가 소진된 현재의 시점에서 정치도덕적 측면에 호소하는 방식은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북한 역시 상급이나 장려금과 같은 물질적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다지만 이 또한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 귀순자들 중 일부는 “남한에서 처럼 일하면 북한에선 노력 영웅이 되고도 남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만큼 노동과정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 ‘젊어서 피병은 늙어서 보약’이라는 노동기피의 유행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들 한다.

노동의욕 상실의 원인은 보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숨은 영웅’이었던 정기해 씨의 경우, 피복류나 술을 몇차례 받아 보았지만 이것은 공장 전체에서 1년에 1~2명 정도 받을 뿐이고 보통노동자에게는 화환 걸어주고 붉은기 쟁취운동 때 영예등록장에 등록해 주는게 전부라고 한다.⁵⁷⁾

그러면 보상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 노동자들은 어떤식의 대응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사적이익 추구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가 집합적 계급으로서 집단적 행위를 조직화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봉쇄될수록, 노동자에게 열려진 행위수단은 개인적 차원이다. 이러한 개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행위는 노동시장의 존재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

56) 내외통신 9464호(1995.4.21 2편)

57) 이상은 중앙일보, 1995년 4월 6일, 4월 11일자 참조

다. 노동시장이 존재했던 소련에서는 노동자의 행위선택이 직장이동과 이에 따른 심각한 노동 유동의 문제로 나타났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혁명시기나 현재의 북한과 같이 노동시장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노동자들은 주로 작업장 내부에서 고의적인 태업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앞서 설명한 고의적인 노동회피, 예를 들어 “지금 알지도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보장을 받으면서 빈들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V. 사회 인식

1. 사회관의 논리적 기초: 사회주의 대가정론

북한의 공식규범에서 사회란 자본주의에서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이나 결합과는 다른, ‘수령-당-대중’이라는 위계적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사회의 구성양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북한공동체의 특징을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국가는 가족의 이미지가 확대된 실체로서 인식된다.⁵⁸⁾ 즉, 북한에는 혈육들이 구성하는 가정과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두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이중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대가정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를 화목한 어버이로 모시고”사는 집안이다. 북한공동체의 윤리가 가정윤리의 사회적 확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공동체 결속을 위한 봉건적 담화들이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

58) 북한체제를 가족국가관과 연결시켜본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世界』1993年 10月號,東京, 1993.10

다. 노동시장이 존재했던 소련에서는 노동자의 행위선택이 직장이동과 이에 따른 심각한 노동 유동의 문제로 나타났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혁명시기나 현재의 북한과 같이 노동시장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노동자들은 주로 작업장 내부에서 고의적인 태업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앞서 설명한 고의적인 노동회피, 예를 들어 “지금 알지도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보장을 받으면서 빈들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V. 사회 인식

1. 사회관의 논리적 기초: 사회주의 대가정론

북한의 공식규범에서 사회란 자본주의에서의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이나 결합과는 다른, ‘수령-당-대중’이라는 위계적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사회의 구성양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북한공동체의 특징을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국가는 가족의 이미지가 확대된 실체로서 인식된다.⁵⁸⁾ 즉, 북한에는 혈육들이 구성하는 가정과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두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이중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대가정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를 화목한 어버이로 모시고”사는 집안이다. 북한공동체의 윤리가 가정윤리의 사회적 확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공동체 결속을 위한 봉건적 담화들이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

58) 북한체제를 가족국가관과 연결시켜본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世界』1993年 10月號,東京, 1993.10

는 것등이 모두 이 ‘사회주의대가정’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의 가
정화 현상은 2차집단의 1차집단화를 의미한다. 북한은 바로 이 메카니즘을 통해
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개인승배에 참여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 대가정내 ‘가족’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강
조되고 있는 것이 일심단결이며,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수령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이다. 북한에서 일심단결은 가장 강조되고 있는 윤리로
서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게 하는 가장 공고한 결합방
식”⁵⁹⁾으로 주장된다. 즉 북한에서 일심단결은 수령과 대중을 하나로 잇는 가장
강력한 구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심단결은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뭉친 단
결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단결은
‘결코 일심단결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주장한다.⁶⁰⁾ 한편 일심단결은 자연스럽게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보답’으로서의 대중의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라는 윤리와 연결되고 있다.

북한의 이론가들은 일심단결이 공고한 것으로 되자면 사상적 기초와 함께 도덕
의리적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수령이 지닌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
여야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심단결, 믿음과 사랑이라는 규범이 현실적 차원에서 어느 정
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주민들 간의
단결과 의리를 해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주민들이 북
한사회를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다.

59) 백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공고한 정치제도」, 『주체
의 사회주의정치제도』154쪽.

60) 백철, 앞의 글, 151쪽.

〈표 V-1〉 설문 내용: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① 매우 평등하다.	0
② 평등하다.	1
③ 보통이다.	0
④ 평등하지 않다.	13
⑤ 매우 평등하지 않다.	6

설문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이유는 당원과 비당원, 상급간부와 하급간부 등 위계구조내에서의 특권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계구조는 다른 한편으로 부패와 흥정의 여지가 개입할 소지를 제공한다. 이는 지위상승 등이 공평정대한 합리적 절차보다 학연이나 지연 등의 전통적 요소의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다음의 질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표 V-2〉 설문내용: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학연 및 지연이 승진이나 진급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① 매우 크다.	7
② 크다.	6
③ 그저 그렇다.	7

설문결과 학연이나 지연이 진급이나 승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 13명이나 된다.

이와같이 북한 사회내에서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개인주의적 연고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공동체적 믿음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심단결이나 동지애적 의리와 같은 공식규범은 위로부터의 통합이데올로기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대가점에서 일심단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수령의 사랑과 믿음

은 대중의 충성과 효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북한문헌은 “일심단결에서 수령과 전사들의 관계는 내리는 사랑에 오르는 충성과 효성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표현한다. 즉, 수령이 베푸는 믿음과 사랑은 인민들로 하여금 “그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려는 혁명 의리심과 도덕의무감을 지니게 한다”는 것이다.⁶¹⁾

이렇듯 북한은 수령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일심단결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되는 이유를 그것이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지극한 효성”을 낳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⁶²⁾ 바로 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북한사회의 이상적인 인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품성”으로 인식된다.⁶³⁾ 따라서 북한에서 대중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할 것을 요구받는다.⁶⁴⁾

여기서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봉건시대의 사회윤리개념인 충과 효가 논리는 변형되었지만 부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충(忠)은 북한이라는 공동체에서 수령에 대한 대중의 당위적 태도, 최고지도자와 대중간의 관계의 공식적 언술로서 부활되었으며 효(孝)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매개로 형성된 수령과 대중의 ‘혈연적관계’에 기초해서 재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사회라는 거시적 차원과 가정이라는 미시적 차원을 동일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담론은 가정내에서의 의사결정에도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게 되는 ‘사회·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여성해방’의 정도가 높다고 추측 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지만 북한의 여성은 이중적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관련, 가정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설

61) 이상은 백철, 앞의 글, 162-163쪽.

62) 김완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일심단결의 원천」 『철학연구』 1992년 제2호, 15쪽.

63) 백설향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도덕화된 충실성」 『철학연구』 1994년 제3호, 26쪽.

64) 백설향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대한 주체적리해」 『철학연구』 1992년 제4호, 26-29쪽.

문결과를 살펴보자.

(표 V-3) 설문내용: 북한 가정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이 결정적입니까?

설문내용	응답자수(명)
① 가장으로서의 남편	17
② 부인	0
③ 자녀들	0
④ 부모	3

여기서 부모라고 답한 응답자는 나이가 어린 응답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가정내 의사결정구조에서 가장의 권위가 결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0%로 나타나고 있다.

2.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1) 집단주의의 강조

북한의 공식규범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회 구성원리는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북한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갈등, 혹은 개인적 이익의 추구는 상정될 수 없다. 이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은 결합된 하나로 인식된다. 즉,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사회정치적생명체,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인식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남한사회에 비해서 집단주의는 북한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이데올로기의 하나다. 북한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 집단주의를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다.(제82조) 집단주의는 북한에서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으로 규정된다.⁶⁵⁾ 이 집단주의의 원칙은 ‘하나
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속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 이
론가들은 집단주의 원칙을 표명한 이 구호를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집
단의 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앞세우며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투
쟁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로서의 집단이 그것을 이
루고 있는 모든 개별적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며 그것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⁶⁾

집단주의에 대한 높은 강조는 북한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집단주의적생명관이란 “인간생명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인 체
계로”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 규정위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집단주의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로부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이 자기 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 집단과 중심
인 수령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규정된다.⁶⁷⁾

2) 개인주의의 확산

하지만 공식규범에서 이와같이 강조되는 집단적 원칙은 실제적 차원에서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 자체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동
원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통제가 오랜 동안 지속되
면, 그것은 일상화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적 원칙이 현실화되는 조직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은

65) 『철학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1985)

66) 전형탁 「은 사회를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시키는데서 도덕이 노는 역할」 『철학연구』
1992년 제4호, 35쪽.

67) 이상은, 리경남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관한 집단주의적생명관의 참다운 우월성」 『철학연구』
1992년 제2호, 37쪽.

자기가 속한 단체별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기술학습등 실새없이 각종 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특히 당원이나 근로단체에 속한 사람이 생활총화에 빠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조직생활을 기피한 사람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당원의 경우 당 회의에 빠지려면 당비서에게 사전에 허락 받아야 하고, 정치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면 근무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매워야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조직생활 자체가 일상화되고, 이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른바 ‘주체형’ 인간개조사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귀순자들 역시, 북한에서 제일 지켜왔던 것은 ‘조직생활’이었다고 밝힌다. 총화시간에 진행되는 상호비판 역시 형식화되고 있음을 많은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⁶⁸⁾

기계적으로 되풀이되는 조직생활로 주민들은 자기비판, 상호비판에도 무감각해져 긴장감이 없다. 생활총화에서 비판받으면 말로는 ‘동지적 비판을 접수한다’지만 마음속으론 ‘보복하고야 말겠다’고 베틀는 풍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조직생활에서 주민들이 보여주는 행위 형태는 다양하다. 일부 주민들은 충성과 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 차원에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차원의 저항이란 대개, 요령이나 테만등으로 나타난다.

요약하면, 외향적으로는 충성의 의사표현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인화된 형태의 이탈행위를 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가치표현의 이중성은 공식분현상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상당한 귀순자들의 증언은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68) 신광호는 조직생활의 테만 현상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즉 “군대에서도 입당 전까지는 당원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당원이 된 뒤에는 조직생활에 오히려 테만한 전사들이 많았다. 1989년 이후 1인당 15분씩이던 비판시간이 2~3분쯤으로 줄어 더욱 형식화됐다.” 중앙일보, 1995년 2월 7일

들어 주체사상 학습시간에 잠을 보충하는 행위, 적당한 구실과 방법을 사용해 직장내의 당원학습시간을 빠지는 행위,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그저 건성으로 흘려듣는 행위등의 다양하다.⁶⁹⁾

이와같이 조직생활이 이완되면서, 주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탈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개인주의적 가치 추구는 중앙집권화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더(Walder)는 중국에서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도구적인 사회관계의 하위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이 일반화된 상태에서는 시장거래의 대체형태가 되고 있다고 한다.⁷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로부터는 집단주의적 원칙, 정신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 행위를 추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적 이익 추구는 시장관계가 확산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론 및 정책대안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는 규범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규범적 인식은 첫째,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영역과 둘째, 북한적 가치관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후자는 다시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변형체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치관과 주체사상과 접맥된 전통적인 봉건성과 연결된 가치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9) 김동만, 김명철, 이철규, 김형만, 황광철, 이옥금 등의 증언을 참고. 중앙일보, 1995년, 2월 7일

70)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p. 26

들어 주체사상 학습시간에 잠을 보충하는 행위, 적당한 구실과 방법을 사용해 직장내의 당원학습시간을 빠지는 행위,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그저 건성으로 흘러드는 행위등의 다양하다.⁶⁹⁾

이와같이 조직생활이 이완되면서, 주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탈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개인주의적 가치 추구는 중앙집권화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월더(Walder)는 중국에서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개인적으로 도구적인 사회관계의 하위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부족이 일반화된 상태에서는 시장거래의 대체형태가 되고 있다고 한다.⁷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로부터는 집단주의적 원칙, 정신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인적 행위를 추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적 이익 추구는 시장관계가 확산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론 및 정책대안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는 규범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규범적 인식은 첫째,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영역과 둘째, 북한적 가치관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후자는 다시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변형체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치관과 주체사상과 접맥된 전통적인 봉건성과 연결된 가치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9) 김동만, 김명철, 이철규, 김형만, 황광철, 이옥금 등의 증언을 참고. 중앙일보, 1995년, 2월 7일

70)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p. 26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봉건성과 연결된 북한의 규범적 가치다. 북한에서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는 현대적인 당과 인민대를 매개로 성립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봉건적인 군민(君民)관계와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회 정치적생명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중 상당부분이 봉건 유교적 담화와 동일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체계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사회생활 과정속에서 광범한 대중적 교양, 학습을 통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효성은 이미 북한사회의 최고의 도덕률로 자리잡고 있다. 즉,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는 현대사상과 봉건적 잔재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규범적 가치관이 주민들의 의식에 내재화 된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당의 권위와 통제가 약화되고 있고, 주민들은 과거 입당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지만 최근들어 돈벌이에 유리한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탈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배급체계가 약화되면서, 시장관계가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물질적 가치추구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조직생활과 집단주의의 일상화로 학습이나 교양이 형식화 되고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생활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일탈 행동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는 위로부터의 규범이 강요되는 한편, 아래로부터의 일탈 역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첫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더욱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귀순자 인터뷰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귀순자 인터뷰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동일시 될 수 없지만, 다른 대안(현지사례연구)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방법은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숫자로 인해 통계처리의 신뢰도가 약화되었지만, 향후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행해 질 필요가 있다. 물론 귀순자라는 특수한 입장, 즉 북한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시각 등은 조사연구의 방법을 개선하여 걸러 낼 필요가 있다.

둘째, 귀순자 조사 과정에서 느낀 것이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북한 체제에서 학습한 공식규범을 부정하는 형태로,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부적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 방향은 일단 북한의 공식규범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깨닫게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인식케 해야 한다. 즉 북한체제에 대한 재교육과 남한체제에 대한 적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주민들(귀순자)의 가치관에 기존에 학습된 공식규범들이 일정부분 내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기존의 공식규범들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귀순자들의 경우 대부분, 북한의 공식규범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긍정하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긍정성의 경향은 남한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낀 반발형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규범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교육되어 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귀순자들이 그 체제에 살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설픈 무조건적인 부정보다 공식규범들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교육자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 공통적 요소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매우 다르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

지만 일부에서 “자유 자본주의도 맑스 사회주의도 간과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한국의 정치의식, 전통적인 정치담론에 대한 재발굴과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⁷¹⁾은 검토할 만 하다. 즉 전통주의 가치관을 활용하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안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부분적으로 왜곡시킨 전통가치를 복원시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북한 양 체제사이의 규범적 가치의 차이점을 해소하는데는 크게 두가지 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먼저 남북이 장기적으로 수렴 통일되면서 가치관 역시 하나로 통일되는 경우다. 일견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이 방식은 수렴론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의 통일이 수렴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결국 남한이 상대적 유도체제가 되어 자신도 발전적으로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북한의 붕괴에 따른 남한 역할의 비정상적인 재고의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중 어느 방식으로 직접적인 통일과정에 접어들든 우리에게 닥치는 과제는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을 어떤식으로 정상화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북한의 규범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중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 내서, 이를 남한의 체제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일 것이다.

71) 함재봉, 『남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동질화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 학술회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1994.11.25) 발표논문

〈참 고 문 헌〉

1. 신문, 잡지, 사전

<로동신문>

『조선중앙연감』

『철학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85)

『경제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85)

중앙일보

조선일보,

내외통신,

2. 북한 문헌

『김일성저작집』(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영도체계』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85) (서울,도서출판지평,1989 재발간)

『프로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71) (동경,구월서방 번각발행)

권오현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제도』 (평양:평양출판사,1993)

김기호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을 기세하려는 현대수정주의 이론의 부당성과 반동성」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김완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일심단결의 원천」 『철학연구』 1992년 제2호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9년 3월 4

일.

김전중 「사회주의적협동생산과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지위」 『경제연구』 1993년 제4호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992)

김정하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발전하는 정치제도」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85)

리경남 「개인주의적생명관에 비한 집단주의적생명관의 참다운 우월성」 『철학연구』 1992년 제2호

리기반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 『경제연구』 1994년 제1호,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2)

박상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에 대한 공산주의도덕의 최고표현」 『철학연구』 1992년 제3호, (평양:사회과학출판사)

박인덕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고수와 발전의 본질적 내용」 『경제연구』 1993년 제3호,

백설향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도덕화된 충실성」 『철학연구』 1994년 제3호,

백설향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대한 주체적리해」 『철학연구』 1992년 제4호,

백철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공고

한 정치제도」『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평양:평양출판사,1992)
 전성일 「소유에서의 <<다양화>>와 그 반동성」『경제연구』1993년 제1호,
 전형탁 「은 사회를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시키는데서 도덕이 노는 역할」『철학연구』1992년 제4호,
 최 립 「사상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생명선」『철학연구』1992년 제3호,15쪽
 최희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수립된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제도」『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평양,평양출판사,1992,

3. 남한 문헌

함재봉, 「남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동질화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동질화의 과제”학술회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1994.11.25) 발표논문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4-23)
 이종석, 『조선로동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역사비평사, 1995)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역사비평사, 1995)
 고승호 지음, 양재성 옮김, 『경제경제의 이해』(서울;평민사, 1993)

4. 외국문헌

Andrew G.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ineses Industry* (Berkeley/Los Angeles/London;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elop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44, no. 1,

和田春樹「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世界』1993年 10月號, 東京, 1993. 10

中共黨員大辭典編委會『中共黨員大辭典』(北京,華齡出版社,1991)

③ 친척 ④ 기타(예를들면)

5)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느꼈던 직접적 동기가 있다면?

6)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는?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7)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관련,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이 많은가?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다. ⑤ 매우 적다.

8)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비교하여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일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① 김일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② 김일성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③ 김일성 보다는 못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④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9) 김정일 체제의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김정일의 건강때문이다. ② 김일성 사후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③ 유훈통치 때문이다. ④ 남북정상회담을 미루기 위해서다.

⑤ 기타의 의견 -----

10) 북한정권의 생존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① 1~3년내에 붕괴한다. ② 3~5년내에 붕괴한다.

③ 5~10년내에 붕괴한다. ④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⑤ 기타의 의견 -----

11)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김정일외 북한에서 저명하거나 인기 있는 지도자를 5명만 꼽는다면?

13)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만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자유롭다. ② 자유롭다. ③ 보통이다.
④ 자유롭지 않다. ⑤ 매우 자유롭지 않다.

14) 북한에서 자신의 자유가 구속당한다고 생각하였던 사례가 있다면?

15)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북한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나?

- ① 매우 평등하다. ② 평등하다. ③ 보통이다.
④ 평등하지 않다. ⑤ 매우 평등하지 않다.

16) 북한에서 자신의 월 평균보수는 얼마였는가?

17) 일반주민들은 북한사회에 신분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확실하게 있다. ② 있는 편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없는 것 같다. ⑤ 확실하게 없다.

18) 만약 신분계층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을 들 수 있는가?

19) 주민들은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권리가 어느 정도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
나?

-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② 지켜지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⑤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

20) 일반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인기있는 직업 3가지와 인기없는 직업 3가지를 쓰시오?

21) 가정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의 의견이 결정적인가?

- ① 가장으로서의 남편 ② 부인 ③ 자녀들 ④ 부모

22)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있다면?(예를들면 정직, 의리 등)

23) 분가시, 1년에 몇번이나 부모를 찾아 보는가?

24)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② 잘 지켜지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5) 북한에서 승진이나 진급을 하기 위해서 청탁 및 뇌물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뇌물이 필요하다. ② 뇌물이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뇌물이 필요하지 않다. ⑤ 뇌물이 전혀 필요없다.

26) 북한에서 승진이나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학연 및 지연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없다.

27) 북한에서 농민들이 협동농업과 개인 텃밭 중 어느 것에 더 정성을 쏟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협동농장의 작업 ② 개인텃밭

28) 농민시장에서 국영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9) 만약 있다면, 어떤 물품들을 구입했습니까? 5가지만 쓰시오.

30)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에서 동료노동자와 서로 어느정도 협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협력한다. ② 협력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협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

31) 만약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32) 북한에서 작업반과 작업반은 서로 어느정도 협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협력한다. ② 협력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협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

33) 만약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34) 북한에서 공장과 기업소 서로간에 어느정도 협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협력한다. ② 협력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협력하지 않는다.
⑤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

35) 만약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36) 단군 왕릉 발굴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실로 믿고 있다. ②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37) 북한에서 가장 즐겨 읽었던 신문이나 방송을 쓰시오.

38) 신문 중에서 가장 즐겨 읽었던 부분(예를들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과 가장 즐겨 본 방송 프로그램은?

39) 귀순전 남한을 알게 된 계기는?

- ① 남한방송 ② 중국교포 ③ 동료 ④ 기타

40) 북한주민들은 남북통일이 어느때 가능하다고 보는가?

- ① 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 ② 1~3년내에 통일은 실현된다.
 ③ 10년내에 통일은 실현된다. ④ 20년내에 통일은 실현된다.
 ⑤ 30년내에 통일은 실현된다.

41) 북한주민들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통일형태는?

- ①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 ② 남한에 의한 무력통일
 ③ 북한의 붕괴에 따른 남한주도의 흡수통일
 ④ 남한의 붕괴에 따른 북한의 흡수통일
 ⑤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이른 시일안에 평화통일
 ⑥ 남북한의 합의에 따른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평화통일

42) 통일이후의 체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① 자본주의 ② 사회주의 ③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

43) 통일이후 체제상과 관련, 북한체제에서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44) 통일이후 체제상과 관련, 남한체제에서 극복해야 할 점은?

.....

45)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대미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 ① 미국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이며 타도의 대상이다.
- ② 미국은 이전에는 타도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협력의 대상이다.
- ③ 미국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협력의 대상이다.

46)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대일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 ① 일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이며 타도의 대상이다.
- ② 일본은 이전에는 타도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협력의 대상이다.
- ③ 일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협력의 대상이다.

47) 북한과 구소련 붕괴후의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면서 대러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 ① 구소련은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으나 현재의 러시아는 적국이다.
- ② 구소련은 이전에도 북한의 자주성을 억압한 패권국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 ③ 구소련과 러시아는 언제나 북한의 형제국이다.

〈신상 질문〉

	나이	성별	북한에서의 직업	현재 직업
출생지				
학력				
경력				
당원/비당원 유무				
가족사항	북한에서의 가족사항		현재의 가족사항	
북한에서의 월 수입				
군대 경력				
북한에서의 개인 하루 일과표 (시간별 기술)				
공혼 여부				
북한에서의 여행 경험				
귀순동기				

통연 96-5-10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

발행처 통일원 통일연수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7123·4, FAX: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266-0892

인쇄일 1996년 5월 23일

발행일 1996년 5월 25일

(비매품)